

2022년도
통일문제 의식조사 결과 보고서

2022년 10월 31일

보고서 제출자 : 김 명 호

(사)통일문제연구원

제1장 연구 개요

문재인 정부 집권기인 2017년부터 2022년 초까지, 문정부는 북한에 대하여 굴종적인 자세로 남북관계를 유지하여 왔다. 그러나 그동안에도 수없이 많은 북한의 도발이 있었다.

특히, 2022년에 들어서 1월 5일, 자강대 일대에서 탄도미사일(북극초음속 주장) 1발 발사를 시작으로, 11일에도 탄도미사일(극초음속 주장) 1발을 발사하였다. 1월 14일과 17일에는 평북 의주 일대에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2발을 발사하는 등 모두 7차례의 미사일을 발사하였다.

그리고 2월 27일에는 평양순안비행장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하였고, 3월에는 4차례, 4월에 1차례, 5월에 4차례 등 수없이 도발을 하였다.

정권이 바뀌어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이 이전의 문 정부의 정책과 완전히 달라졌다. 그러자 북한은 한미가 항공모함을 동원한 연합훈련을 마친 지 하루만인 2022년 6월 5일 평양 순안 등 4곳에서 동해상으로 35분간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8발을 발사했다.¹⁾

그리고 9월에 3차례, 10월에 11차례의 도발을 하였으며, 그 내용도 공대지 사격훈련, 전투기 동원, 방사포 등 포격 사격, 탄도 미사일 발사 등으로 다양해졌다.²⁾

최근, 북한이 대한민국을 향하여 도발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이 우리 군의 대규모 기동훈련 마지막 날인 2022년 10월 28일 동해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2주 만이다. 미국 국방부가 10월 27일(현지 시각) “핵 사용은 북한의 정권 종식으로 귀결될 것”이란 ‘핵태세 검토보고서’를 발표한 것에 대한 반발 성격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합참은 이날 “북한이 오전 11시 59분부터 낮 12시 18분까지 강원도 통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두 미사일은 마하 5 속도로 약 230km 거리를 24km 고도로 비행한 것으로 탐지됐다. 고도 24km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의 최저 요격 고도인 50km보다 낮아 사드로는 요격이 불가능하다. 패트리엇(PAC-3) 요격 미사일 사정권에는 들어가지만 음속의 5배 이상 날아가면 요격이 쉽지 않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한미 요격을 피할 수 있는 미사일 시험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발사 시간과 장소, 비행 거리를 수시로 바꾸며 발사하는 것은 한미 정보력에 혼선을 주려는 속셈으로 읽힌다”고 했다.³⁾

1) 「연합뉴스」. “올해 북한 무력도발 일지” 2022년 6월 5일.

2) 「연합뉴스」. “최근 북한 무력도발 일지” 2022년 10월 28일.

3) 「조선일보」. “요격 회피 미사일… 北, 2주만에 발사” 2022년 10월 29일.

그리고 북한은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 실시를 이틀 앞두고 “전쟁의 불구름이 시시각각 몰려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외선전매체 ‘통일의 메아리’는 2022년 10월 29일 사회과학원 실장 리진성의 기고문을 통해 “괴뢰군부패당은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괴뢰지역 상공에서 대규모 공군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인 ‘비질런트 스톰’을 강행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리 실장은 “최근 조선반도(한반도)에 조성된 엄중한 정세 격화는 미국의 악랄한 대조선(대북) 적대시 정책과 윤석열 역적패당의 반(反)공화국 대결 책동에 의한 것”이라며 “정세 악화를 초래하는 장본인은 바로 윤석열 역적패당”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북한이 전날 강원도 통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2발에 대한 보도는 이날 없었다.⁴⁾

미 국방부가 10월 27일(현지 시각) 동시 발표한 ‘국방전략보고서(NDS)’와 ‘핵태세 검토보고서(NPR)’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에는 중국·러시아·북한·이란의 동시다발적 위협 속에 시시각각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해야 하는 미국의 고민과 대책이 담겨 있다. 국방전략보고서에서 미 국방부는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미국 국가 안보에 가장 포괄적이고 심각한 도전은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 체제를 자국 국익과 독재적 선호에 맞추려는 중국의 강압적이고 점점 더 공격적인 시도”라고 평가했다. 이어 러시아를 “즉각적 위협”, 북한·이란과 폭력적 극단주의 단체들을 “지속적 위협”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한때 채택을 검토했던 ‘핵 선제 불사용(No First Use)’ 정책은 깨끗하게 포기했다. ‘미 본토가 직접 핵 공격을 받지 않는 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선언할 경우, 동맹·파트너에 대한 리스크가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다고 결론 내린 것이다. 적국의 핵 공격에 대한 억지와 보복 목적으로만 핵무기를 사용하는 ‘단일 목적(Sole Purpose)’ 정책도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지만, 같은 이유로 이번에 채택되지 않았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는 오히려 미국 핵무기의 역할이 커지는 양상이다. NPR에서 미 국방부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 억지와 관련해 “중국, 북한, 러시아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 점증하는 우려를 인식하고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더 강한 확장 억제(핵우산)”가 필요하다면서 “미국은 역대 핵 갈등을 억지하기에 적합한 유연한 핵 전력을 계속해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연한 핵 전력’에는 “전략폭격기, 탄도미사일 발사 전략잠수함, (핵과 재래식 공격이 모두 가능한) 이중 용도 전투기와 핵무기의 지역적, 세계적 전진 배치”가 포함된다고 서술했다. 북한과 중국의 핵 위협에 맞서 전략 자산을 전진 배치하겠다는 의미다.⁵⁾

4) 「조선일보」. “북한,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난…“전쟁 불구름 몰려와” 2022년 10월 29일.

5) 「조선일보」. “美, 전략폭격기·잠수함 전진배치… 선제 핵공격 가능성 열어놔” 2022년 10월 29일.

이와 같이 끊임없이 도발을 감행하는 북한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이 어떠한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설문조사는 2022년 9월 15일부터 10월 28일까지 북한과 접경지역을 접하고 있는 강원도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직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673부의 설문지 가운데 인적사항에 대한 답이 없거나 설문항목에 대하여 불성실한 답을 한 5부를 제외하고, 668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본 조사의 설문 내용은 ① ‘응답자의 인적사항’, ② ‘통일 정책 문제’, ③ ‘북한에 대한 인식과 정책’ 등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는 SPSS V.19를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설문에 답한 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대해서는 빈도수와 백분율을 산출하는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응답자들의 연령에 따른 통일 정책 문제와 북한에 대한 인식에 대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생각’, ‘통일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대북정책’, ‘통일을 위해 앞장서서 노력해야 할 대상’ 등은 3개의 답변이 가능한 다중응답분석을 실시하였다.

제2장 기초연구

[A. 인적사항]

1. 성별

설문지에 응답한 사람은 ‘남자’가 448명(67.1%), ‘여자’가 220명(32.9%)으로 나타났다.

<표 1-1> 성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남자	448	67.1	67.1	67.1
	여자	220	32.9	32.9	100.0
합계		668	100.0	100.0	

2. 나이

설문지에 답한 사람들의 나이는 ① ‘20세 이하’ 66명(9.9%), ② ‘21-30세’ 387명

(57.9%), ③ ‘31-40세’ 94명(14.1%), ④ ‘41-50세’ 79명(11.8%), ⑤ ‘51-60세’ 33명(4.9%), ⑥ ‘61세 이상’ 9명(1.3%)으로 나타났다.

<표 1-2> 나이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20세 이하	66	9.9	9.9	9.9
21-30세	387	57.9	57.9	67.8
31-40세	94	14.1	14.1	81.9
41-50세	79	11.8	11.8	93.7
51-60세	33	4.9	4.9	98.7
61세 이상	9	1.3	1.3	100.0
합계	668	100.0	100.0	

3. 직업

설문지에 답한 사람들의 직업을 살펴보면, ① ‘대학 1학년’ 80명(12.0%), ② ‘대학 2학년’ 183명(27.4%), ③ ‘대학 3학년’ 124명(18.6%), ④ ‘대학 4학년’ 42명(6.3%), ⑤ ‘일반인’ 231명(34.6%)으로 나타났다.

<표 1-3> 직업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대학 1학년	80	12.0	12.1	12.1
대학 2학년	183	27.4	27.7	39.8
대학 3학년	124	18.6	18.8	58.6
대학 4학년	42	6.3	6.4	65.0
일반인	231	34.6	35.0	100.0
합계	660	98.9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8	1.1		
합계	668	100.0		

[B. 통일 정책 문제]

1. 통일의 필요성

통일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한 결과, ① ‘반드시 통일돼야 한다’ 115명(17.2%), ② ‘조금 필요하다’ 159명(23.8%), ③ ‘보통이다’ 157명(23.5%), ④ ‘아직 시기상조다’ 174명(26.0%), ⑤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다’ 63명(9.4%)으로 나타났으며, 41.0%가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통일의 필요성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만드시 통일돼야 한다	115	17.2	17.2	17.2
	조금 필요하다	159	23.8	23.8	41.0
	보통이다	157	23.5	23.5	64.5
	아직 시기상조다	174	26.0	26.0	90.6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다	63	9.4	9.4	100.0
	합계	668	100.0	100.0	

2. 통일에 대한 이익 정도

통일이 대한민국에 어느 정도의 이익이 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① ‘이익이 매우 클 것이다’ 152명(22.8%), ② ‘이익이 조금 있을 것이다’ 252명(37.7%), ③ ‘이익이 거의 없을 것이다’ 134명(20.1%), ④ ‘오히려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130명(19.5%) 등으로 나타났다. 즉, 질문에 답한 사람들의 60.5%가 통일이 대한민국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통일에 대한 이익 정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이익이 매우 클 것이다	152	22.8	22.8	22.8
	이익이 조금 있을 것이다	252	37.7	37.7	60.5
	이익이 거의 없을 것이다	134	20.1	20.1	80.5
	오히려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130	19.5	19.5	100.0
	합계	668	100.0	100.0	

3. 남북한 통일의 가능성

남북한 통일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① ‘100% 가능하다’ 36명(5.4%), ② ‘50% 정도 가능하다’ 146명(21.9%), ③ ‘20~30% 정도 가능하다’ 257명(38.5%), ④ ‘불가능하다’ 139명(20.8%), ⑤ ‘모르겠다’ 90명(13.5%)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65.7%가 남북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남북한 통일의 가능성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00% 가능하다	36	5.4	5.4	5.4
	50% 정도 가능하다	146	21.9	21.9	27.2
	20~30% 정도 가능하다	257	38.5	38.5	65.7
	불가능하다	139	20.8	20.8	86.5
	모르겠다	90	13.5	13.5	100.0
	합계	668	100.0	100.0	

4. 남북통일의 실현 전망

남북통일의 실현에 대한 전망에 대하여 ① ‘아주 빠를 것이다’ 15명(2.2%), ② ‘조금 빠를 것이다’ 73명(10.9%), ③ ‘조금 늦을 것이다’ 210명(31.4%), ④ ‘아주 늦을 것이다’ 276명(41.3%), ⑤ ‘불가능할 것이다’ 94명(14.1%)으로 나타났다. 즉, 남북통일이 빠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13.2%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 남북통일의 실현 전망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아주 빠를 것이다	15	2.2	2.2	2.2
	조금 빠를 것이다	73	10.9	10.9	13.2
	조금 늦을 것이다	210	31.4	31.4	44.6
	아주 늦을 것이다	276	41.3	41.3	85.9
	불가능할 것이다	94	14.1	14.1	100.0
	합계	668	100.0	100.0	

5. 국가안보에 대한 관심도

국가안보에 대한 귀하의 관심도는 ① ‘관심이 아주 많다’ 68명(10.2%), ② ‘관심이 조금 많다’ 145명(21.7%), ③ ‘보통이다’ 287명(43.0%), ④ ‘관심이 조금 없다’ 82명(12.3%), ⑤ ‘관심이 아주 없다’ 50명(7.5%), ⑥ ‘모르겠다’ 36명(5.4%)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4.9%가 국가안보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국가안보에 대한 관심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관심이 아주 많다	68	10.2	10.2	10.2
	관심이 조금 많다	145	21.7	21.7	31.9
	보통이다	287	43.0	43.0	74.9
	관심이 조금 없다	82	12.3	12.3	87.1
	관심이 아주 없다	50	7.5	7.5	94.6
	모르겠다	36	5.4	5.4	100.0
	합계	668	100.0	100.0	

6. 통일방식에 대한 생각

통일방식에 대한 생각은 ① ‘가급적 빠른 통합’ 142명(21.3%), ② ‘평화체제를 유지하면서 남북한 별개의 국가로 존속’ 375명(56.1%), ③ ‘현 체제 유지’ 146명(21.9%)으로 나타났다.

<표 2-6> 통일방식에 대한 생각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가급적 빠른 통합	142	21.3	21.4	21.4
	평화체제유지와 별개국가로 존속	375	56.1	56.6	78.0
	현 체제 유지	146	21.9	22.0	100.0
	합계	663	99.3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5	.7		
합계		668	100.0		

7.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중요한 협력관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가장 중요한 협력관계는 ① ‘한미 간 협력’ 133명 (19.9%), ② ‘북미 간 협력’ 82명(12.3%), ③ ‘한중 간 협력’ 41명(6.1%), ④ ‘한일 간 협력’ 10명(1.5%), ⑤ ‘한미일 간 협력’ 58명(8.7%), ⑥ ‘한미북 간 협력’ 341명 (51.0%)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과의 협력관계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가장 중요한 협력관계임을 나타내었다.

<표 2-7>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중요한 협력관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한미 간 협력	133	19.9	19.9	20.4
	북미 간 협력	82	12.3	12.3	32.6
	한중 간 협력	41	6.1	6.1	38.8
	한일 간 협력	10	1.5	1.5	40.3
	한미일 간 협력	58	8.7	8.7	49.0
	한미북 간 협력	341	51.0	51.0	100.0
	합계	665	99.6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	.4		
합계		668	100.0		

8. 최우선적 정부의 대북정책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부의 대북정책으로는 ① ‘북한의 비핵화 조치’ 233명(34.9%), ② ‘평화협정 체결’ 179명(26.8%), ③ ‘남북 간 경제협력’ 74명(11.1%), ④ ‘북한의 개혁·개방’ 110명(16.5%), ⑤ ‘남북 간 이산가족 상봉’ 59명(8.8%) 등으로 나타났다. 즉, 정부의 북한에 대한 비핵화 조치가 우선적으로 추진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 최우선적 정부의 대북정책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북한외 비핵화 조치	233	34.9	34.9	34.9
평화협정 체결	179	26.8	26.8	61.7
남북 간 경제협력	74	11.1	11.1	72.8
북한의 개혁·개방	110	16.5	16.5	89.2
남북 간 이산가족 상봉	59	8.8	8.8	98.1
기타	13	1.9	1.9	100.0
합계	668	100.0	100.0	

9. 국가 안보상황에 대한 전망

국가 안보상황에 대한 응답자들의 전망은 ① ‘크게 개선될 것이다’ 21명(3.1%), ② ‘조금 개선될 것이다’ 175명(26.2%), ③ ‘지금과 같이 유지될 것이다’ 303명(45.4%), ④ ‘조금 악화될 것이다’ 124명(18.6%), ⑤ ‘아주 악화될 것이다’ 45명(6.7%)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들 가운데 29.3%는 국가 안보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표 2-9> 국가 안보상황에 대한 전망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크게 개선될 것이다	21	3.1	3.1	3.1
조금 개선될 것이다	175	26.2	26.2	29.3
지금과 같이 유지될 것이다	303	45.4	45.4	74.7
조금 악화될 것이다	124	18.6	18.6	93.3
아주 악화될 것이다	45	6.7	6.7	100.0
합계	668	100.0	100.0	

10.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현 정부 외교·안보 정책에 대한 응답자의 내용을 살펴보면, ① ‘아주 잘하고 있다’ 21명(3.1%), ② ‘조금 잘하고 있다’ 76명(11.4%), ③ ‘보통이다’ 304명(45.5%), ④ ‘조금 못하고 있다’ 143명(21.4%), ⑤ ‘아주 못하고 있다’ 123명(18.4%)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의 60.1%가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0>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아주 잘하고 있다	21	3.1	3.1	3.1
	조금 잘하고 있다	76	11.4	11.4	14.5
	보통이다	304	45.5	45.6	60.1
	조금 못하고 있다	143	21.4	21.5	81.6
	아주 못하고 있다	123	18.4	18.4	100.0
	합계	667	99.9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		
합계		668	100.0		

[C. 북한에 대한 인식과 정책]

1. 북한과 대한민국의 민족성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의 민족성에 대하여 ① ‘북한과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 313명(46.9%), ② ‘이제는 같은 민족이 아니다’ 201명(30.1%), ③ ‘모르겠다’ 147명(22.0%)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의 46.9%는 대한민국과 북한이 같은 민족으로 생각하지만, 나머지는 ‘같은 민족이 아니다’거나 ‘모르겠다’는 응답을 하여 분단의 세월이 우리들의 사고를 바꾸어 놓은 것으로 생각된다.

<표 3-1> 북한과 대한민국의 민족성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북한과 우리는 같은 민족이다	313	46.9	47.0	47.0
	이제는 같은 민족이 아니다	201	30.1	30.2	77.2
	모르겠다	147	22.0	22.1	100.0
	합계	666	99.7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2	0.3		
합계		668	100.0		

2. 북한에 대한 생각

북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하여 1차적으로는 ‘①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이다’가 382명(57.2%)을 차지하여, 긴박한 남북관계를 응답자들이 항상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지난 2021년의 57.1%와 거의 비슷한 값이다.

<표 3-2> 북한에 대한 생각 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이다	382	57.2	57.2	57.4
	협력의 대상이다	205	30.7	30.7	88.0
	통일의 대상이다	52	7.8	7.8	95.8
	경계의 대상이다	18	2.7	2.7	98.5
	도움의 대상이	4	.6	.6	99.1
	선의를 경쟁을 하는 대상이다	3	.4	.4	99.6
	우리의 적이다	3	.4	.4	100.0
	합계	667	99.9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		
합계		668	100.0		

그리고 응답자들이 2차적으로 생각하는 북한은 ‘③ 통일의 대상이다’ 257명(38.5%)으로 나타났다.

<표 3-3> 북한에 대한 생각 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이다	11	1.6	1.7	1.7
	협력의 대상이다	112	16.8	17.6	19.3
	통일의 대상이다	257	38.5	40.6	59.9
	경계의 대상이다	217	32.5	34.3	94.2
	도움의 대상이	34	5.1	5.3	99.5
	선의를 경쟁을 하는 대상이다	1	.1	.1	99.6
	우리의 적이다	3	.4	.4	100.0
	합계	635	95.1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3	4.9		
합계		668	100.0		

그리고 응답자들이 3차적으로 생각하는 북한은 ‘⑦ 우리의 적이다’가 181명(27.1%)으로, 많은 응답자가 북한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4> 북한에 대한 생각 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이다	19	2.8	3.0	3.0
	협력의 대상이다	8	1.2	1.3	4.3
	통일의 대상이다	68	10.2	10.7	15.0
	경계의 대상이다	170	25.5	26.9	41.9
	도움의 대상이	129	19.3	20.4	62.3
	선의를 경쟁을 하는 대상이다	58	8.7	9.2	71.5
	우리의 적이다	181	27.1	28.5	100.0
	합계	633	94.8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35	5.2		
합계		668	100.0		

즉, 많은 응답자들은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이며, 한편으로 통일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김정은 정권에 대한 호감도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한 호감도에 대하여 ① ‘아주 좋다’ 4명(0.6%), ② ‘조금 좋다’ 9명(1.3%), ③ ‘보통이다’ 149명(22.3%), ④ ‘조금 안좋다’ 168명(25.1%), ⑤ ‘아주 안좋다’ 338명(50.6%)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의 75.7%가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2021년의 결과인 70.9%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잦은 미사일 도발 등이 그 원인으로 추정된다.

<표 3-5> 김정은 정권에 대한 호감도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아주 좋다	4	.6	.6	.6
	조금 좋다	9	1.3	1.3	1.9
	보통이다	149	22.3	22.3	24.2
	조금 안좋다	168	25.2	25.2	49.4
	아주 안좋다	338	50.6	50.6	100.0
	합계	668	100.0	100.0	

4. 북한의 향후 변화 가능성

북한의 향후 변화 가능성에 대하여 ① ‘적극적으로 개혁·개방에 나설 것이다’ 39명(5.8%), ② ‘소극적으로 개혁·개방에 나설 것이다’ 214명(32.0%), ③ ‘개혁·개방을 하지 않을 것이다’ 289명(43.3%) , ④ ‘모르겠다’ 126명(18.9%)으로 나타났다. 즉, 응답자의 37.9%는 북한이 개혁·개방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이 결과는 지난 2021년의 50.6%보다 많이 줄어든 값이다.

<표 3-6> 북한의 향후 변화 가능성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적극적으로 개혁 개방에 나설 것이다	39	5.8	5.8	5.8
	소극적으로 개혁 개방에 나설 것이다	214	32.0	32.0	37.9
	개혁 개방을 하지 않을 것이다	289	43.3	43.3	81.1
	모르겠다	126	18.9	18.9	100.0
	합계	668	100.0	100.0	

5. 북한의 핵·미사일 포기 가능성

북한의 핵·미사일 포기 가능성에 대하여 ① ‘100% 포기할 것이다’ 16명(2.4%), ② ‘50% 정도 가능하다’ 66명(9.9%), ③ ‘포기하는 척만 할 것이다’ 257명(38.5%), ④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257명(38.5%), ⑤ ‘모르겠다’ 72명(10.8%)으로 나타났다. 즉,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12.3%)보다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자(71.0%)가 월등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2021 년도의 북한의 핵·미사일 포기 가능성에 대한 결과값인 20.0%보다 상당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 북한의 핵·미사일 포기 가능성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00% 포기할 것이다	16	2.4	2.4	2.4
	50% 정도 가능하다	66	9.9	9.9	12.3
	포기하는 척만 할 것이다	257	38.5	38.5	50.7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257	38.5	38.5	89.2
	모르겠다	72	10.8	10.8	100.0
	합계	668	100.0	100.0	

6.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감

북핵 문제 해결의 기대감에 대하여 ① ‘100% 가능하다’ 14명(2.1%), ② ‘50% 정도 가능하다’ 90명(13.5%), ③ ‘조금 어렵다’ 345명(51.6%), ④ ‘절대 불가능하다’ 140명(21.0%), ⑤ ‘모르겠다’ 79명(11.8%)으로 나타났다. 즉, 북핵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15.6%로 나타나 북핵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응답자(72.6%)에 비하여 월등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8> 북핵 문제 해결의 기대감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100% 가능하다	14	2.1	2.1	2.1
	50% 정도 가능하다	90	13.5	13.5	15.6
	조금 어렵다	345	51.6	51.6	67.2
	절대 불가능하다	140	21.0	21.0	88.2
	모르겠다	79	11.8	11.8	100.0
	합계	668	100.0	100.0	

7.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대북정책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대북정책의 첫 번째 내용은 ‘①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406명(60.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2021년도의 결과인 63.6% 보다는 조금 낮지만, 응답자들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 최우선 대북정책 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북한의 비핵화 조치	406	60.8	60.9	60.9
	평화협정 체결	129	19.3	19.3	80.2
	남북 간 경제협력	51	7.6	7.6	87.9
	북한의 개혁 및 개방	49	7.3	7.3	95.2
	남북 간 이산가족 상봉	19	2.8	2.8	98.1
	북한주민의 인권신장	6	.9	.9	99.0
	남북 간 문화 및 체육 교류	2	.3	.3	99.3
	남북 간 교육협력	5	.7	.7	100.0
	합계	667	99.9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		
합계		668	100.0		

그 다음으로 추진되어야 할 대북정책은 ‘② 평화협정 체결’로 225명(33.7%)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0> 최우선 대북정책 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북한의 비핵화 조치	32	4.8	4.8	4.8
	평화협정 체결	225	33.7	34.1	38.9
	남북 간 경제협력	110	16.5	16.6	55.5
	북한의 개혁 및 개방	131	19.6	19.9	75.4
	남북 간 이산가족 상봉	94	14.1	14.2	89.5
	북한주민의 인권신장	38	5.7	5.7	95.3
	남북 간 문화 및 체육 교류	21	3.1	3.2	98.5
	남북 간 교육협력	10	1.5	1.5	100.0
	합계	661	99.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7	1.0		
합계		668	100.0		

3번째로 추진되어야 할 대북정책으로 ‘④ 북한의 개혁 및 개방’이 144명(21.6%)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1> 최우선 대북정책 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북한의 비핵화 조치	12	1.8	1.8	1.8
	평화협정 체결	36	5.4	5.4	7.2
	남북 간 경제협력	111	16.6	16.7	23.9
	북한의 개혁 및 개방	144	21.6	21.8	45.7
	남북 간 이산가족 상봉	87	13.0	13.2	58.9
	북한주민의 인권신장	122	18.3	18.5	77.4
	남북 간 문화 및 체육 교류	87	13.0	13.2	90.6
	남북 간 교육협력	62	9.3	9.4	100.0
	합계	661	99.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7	1.0		
합계		668	100.0		

응답자들은 북한에 대한 대북정책으로 먼저 북한의 비핵화이며, 이어서 평화협정 체결, 북한의 개혁 및 개방을 생각하고 있었다.

8. 통일을 위한 선두 주자

통일을 위하여 앞장서서 노력해야 하는 선두 주자에 대하여 ‘③ 북한’이 232명(34.7%)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2번째의 국가는 ‘① 한국’ 350명(52.4%)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1년 결과에서 미국이 첫 번째 선두 주자였는데, 올해 북한이 미국을 앞선 것이 특이하다.

<표 3-12> 통일을 위한 선두 주자 1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한국	118	17.7	17.8	17.8
	미국	198	29.6	29.8	47.6
	북한	232	34.7	34.9	82.5
	중국	62	9.3	9.3	91.8
	일본	4	.6	.6	92.4
	러시아	7	1.0	1.0	93.4
	국제사회	22	3.3	3.4	96.8
	기업	8	1.2	1.2	98.0
	시민단체	5	.7	.8	98.8
	한국 국민 개개인	8	1.2	1.2	100.0
	합계	664	99.5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	.5		
합계		668	100.0		

<표 3-13> 통일을 위한 선두 주자 2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한국	350	52.4	52.4	52.5
	미국	96	14.4	14.4	68.0
	북한	176	26.3	26.3	94.3
	중국	12	1.8	1.8	96.1
	일본	4	.6	.6	96.7
	러시아	3	.4	.4	97.2
	국제사회	18	2.7	2.7	99.9
	기업	1	.1	.1	100.0
	시민단체				
	한국 국민 개개인	7	1.0	1.0	
	합계	667	100.0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1	.1		
합계		668	100.0		

<표 3-14> 통일을 위한 선두 주자 3

		빈도	퍼센트	유효 퍼센트	누적퍼센트
유효	한국	69	10.3	10.4	10.4
	미국	119	17.8	17.9	28.3
	북한	126	19.0	19.0	47.3
	중국	91	13.6	13.7	61.0
	일본	13	1.9	2.0	63.0
	러시아	16	2.4	2.4	65.4
	국제사회	102	15.3	15.4	80.8
	기업	29	4.3	4.3	85.1
	시민단체	21	3.1	3.2	88.3
	한국 국민 개개인	78	11.7	11.7	100.0
	합계	664	99.4	100.0	
결측	시스템 결측값	4	.6		
합계		668	100.0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미국이 앞장서서 노력하여야 하며, 한국과 북한의 협력을 이끌어 내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장 결론 및 시사점

그동안 열린 남북정상회담은 2000년 6월 김대중-김정일, 2007년 10월 노무현-김정일, 2018년 4월, 5월, 9월 문재인-김정은 사이 등 모두 5차례가 열렸다. 이외에도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는 시도는 매 정부마다 있어 왔으나 실패하고 말았다.⁶⁾

북한에 대하여 전 세계가 요구하는 주요 내용은 북한의 비핵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더구나 북한의 계속되는 핵개발은 한반도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북한은 미국으로부터의 체제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이유로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에 대하여 주변국과의 관계 정립과 인권문제 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북한과 접경을 하고 있는 강원도와 경기도의 대학생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2022년 9월 15일부터 10월 28일까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대학생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직접조사를 실시하였다. 회수된 673부의 설문지 가운데 인적사항에 대한 답이 없거나 설문항목에 대하여 불성실한 답을 한 5부를 제외하고, 668부

6) 정국진. (2018). “남북정상회담 개최합의 요인분석 : 리더십 변수를 중심으로.”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최근, 2022년도에 실시한 설문을 통한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북한 통일의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① '100% 가능하다' 36명(5.4%), ② '50% 정도 가능하다' 146명(21.9%), ③ '20~30% 정도 가능하다' 257명(38.5%), ④ '불가능하다' 139명(20.8%), ⑤ '모르겠다' 90명(13.5%)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65.7%가 남북통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통일의 실현에 대한 전망에 대하여는 ① '아주 빠를 것이다' 15명(2.2%), ② '조금 빠를 것이다' 73명(10.9%)로 나타났다. 즉, 남북통일이 빠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13.2%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방식에 대한 생각은 ① '가급적 빠른 통합' 142명(21.3%), ② '평화체제를 유지하면서 남북한 별개의 국가로 존속' 375명(56.1%), ③ '현 체제 유지' 146명(21.9%)으로 나타나 현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보는 응답자들이 많았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가장 중요한 협력관계는 '한미북 간 협력'이 341명(51.0%)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과 미국 그리고 북한과의 협력관계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가장 중요한 협력관계임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많은 응답자들은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이며, 한편으로 통일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5.7%가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2021년의 결과인 70.9%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잦은 미사일 도발 등이 그 원인으로 추정된다.

또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12.3%)보다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자(71.0%)가 월등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2021년도의 북한의 핵·미사일 포기 가능성에 대한 결과값인 20.0%보다 상당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북핵 문제의 해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15.6%로 나타나 북핵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응답자(72.6%)에 비하여 월등하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대북정책의 첫 번째 내용은 '①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406명(60.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2021년도의 결과인 63.6% 보다는 조금 낮지만, 응답자들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설문조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국민들의 남북통일에 대한 인식도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